

■ 제 2 주 제

남북 언론 교류 현황과 중재기구 필요성

신 석 호

(동아일보 디지털뉴스팀장 · 북한학 박사)

남북 언론 교류 현황과 중재기구 필요성

신석호 (동아일보 디지털뉴스팀장 · 북한학 박사)

I. 들어가며

지난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남북 언론 교류 협력에 대한 기대와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12월까지 계속된 북한의 핵·미사일 전략도발 국면에서 그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은 물론 논의조차 불가능했다. 하지만 올해 1월 1일 신년사를 시작으로 김정은 북한 노동당 국무위원장이 전향적인 대외 평화공세로 나오면서 남북 언론 교류가 실현되기 시작했으며, 이의 확대를 위한 정부당국과 언론계 차원의 논의가 여러 차례 공론화되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7월 19일 프레스센터에서 ‘정부-언론단체 조찬간담회’를 열고 정부와 언론단체들의 공론장을 마련했다. 통일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관계당국과 한국기자협회 언론노조 신문협회 등 언론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남북 언론 교류 현황과 미래에 대해 토론했다.¹⁾ 재단은 8월 16일에도 프레스센터에서 ‘남북 언론 교류 무엇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주최했다.²⁾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지는 등 남북관계 개선이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언론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제안도 이어졌다. 임동원 한반도 평화포럼 공동이사장은 9월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원로자문단과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남과 북의 통신사가 서로의 건물에서 상주하며 활동을 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³⁾ 앞서 6·15남측위원회 언론본부는 6월 20일 평양에서 열린 ‘6·15민족공동위원회 남북해외위원장회의’에 참석해 ‘남북언론중재기구(가칭)’의 설립을 제안했다. ‘남북 언론 교류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이라는 제안서를 통해 “오보 방지, 반론보도 등 남북 언론의 불신을 제거하고, 상호 신뢰성 및 사실보도 그리고 평화와 번영을 위한 미래 지향적 보도를 강화하고자 한다”며 별도의 발족 추진 제안문까지 공개했다.⁴⁾

1) 인천신문 인터넷판(2018. 7. 23).

2) 한국기자협회보 인터넷판(2018. 8. 22).

3) 연합뉴스 인터넷판(2018. 9. 14).

4) 변상욱 (2018), 남북 신뢰 제고를 위한 공동 언론중재기구 구축의 필요성, <언론중재>, 148호.

이 발표문은 위와 같은 사회적 공론화의 연장선에서 ‘남북 언론 교류 현황과 중재 기구 필요성’을 주제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① 남북 언론 교류 현황, ② 활발한 남북 언론 교류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에 대한 논의, ③ 남북 간 오보의 해결방안으로서의 중재 기구 설립에 대한 논의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2018년 11월 말 현재, 정부와 언론단체의 논의 차원을 떠나서 개별 언론사들의 구체적인 남북 언론 교류 사례가 축적되었다. 본 발표문은 이에 대한 실증적인 조사와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현장 전문가 인터뷰 조사기법을 사용했다. 2018년 11월 현재 남북 언론 교류를 위한 상설조직을 따로 설치하고 있거나 공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언론사인 KBS, MBC, SBS, JTBC와 연합뉴스에 11월 8일 아래와 같은 질문지를 보냈다.

1. 2018년 귀사가 이뤄낸 남북 방송 교류 성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프로젝트별로 보도내용, 방북 기간과 인력 등)
2. 2019년에는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3. 북한의 비핵화 진전을 전제로 남북방송교류가 어떤 수순으로 발전되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 남북 방송 교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들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5. 남북 간에도 언론중재제도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에 대해 11월 16일까지 김현경 MBC 통일방송추진단 국장, 이우탁 연합뉴스 통일 언론연구소 부소장, 표인구 SBS 남북교류협력단장이 실명으로 답변을 보내왔다. KBS에서는 한 관계자가 익명을 전제로 ‘개인 의견’을 보내왔다. 아래에서는 이들의 답변을 중심으로 위에서 제기한 질문에 대답하기로 한다.

II. 2018년 남북 언론 교류의 성과

답변을 종합한 결과, 2018년 11월 16일 현재 조사 대상 언론사들의 남북 언론 교류는 연초보다 크게 활성화된 상태였다.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났는데, 첫째는 대북제재라는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해 비용이 들지 않는 방향으로 다른 단체의 협력사업에 편승해 평양 현지를 취재하거나 남한에 내려온 북측 인사들의 활동을 보도하는 형태였다. 아직 언론사 차원의 독자적인 방북 취재 등은 실현되지 않고 있었다. 둘째는 미국 시민권

자나 영주권자 등 방북이 자유로운 제3국인을 통해 북한 현지를 취재한 후 남측에서 후속작업을 진행해 방송하는 방식이었다. 각 사별 사례를 아래와 같이 정리했다.

1. MBC 사례

가장 많은 실행 사례를 구체적으로 보내온 곳은 MBC였다. 주요 사례 별로 답변 내용을 정리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표 1 > 2018년 MBC의 남북 언론 교류 주요 내용

1. 평창올림픽 기념 남북 태권도 선수단 MBC 상암홀 특별 시범공연	
행사 내용	◦ 한국 주도 세계태권도연맹(WT)과 북한 주도 국제태권도연맹(ITF) 협연 ◦ 2월 14일 MBC 상암홀에서 합동 공연
보도 내용	◦ '원 코리아 평화 태권도' 공연 실황 녹화 중계방송 ◦ 통일전망대에서 태권도 특집 프로그램 방영 (북측 태권도 선수단 동정 등 현장 아이템 포함) ◦ 뉴스 데스크 방송
보도 의미	2018 남한 방송사상 최초의 남북 교류 성과
2. 남측 예술단 평양 공연 주관 중계사로 방북 중계방송	
행사 내용	◦ 3월 31일~4월 3일 동평양대극장과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남측 예술단 공연
보도 내용	◦ 공연 녹화 및 남측 방송사에 제공 ◦ 방북인력 15명(PD 및 중계기술인력)
보도 의미	◦ 북측 조선중앙TV 및 지원인력과 협력
3. 아리스포츠컵 유소년 축구대회 평양 대회 취재	
행사 내용	◦ 8월 10일~19일 평양 능라도 5·1경기장(선수단 등 151명 방북)
보도 내용	◦ 뉴스 데스크 등 데일리 뉴스와 통일전망대 방송 ◦ 3명 취재진 파견
보도 의미	◦ 북측에서 열린 스포츠교류행사 방북 취재
4. 세계태권도연맹(WT) - 국제태권도연맹(ITF) 평양 합동시범공연	
행사 내용	◦ 10월 30일~11월 3일 평양 태권도전당 등에서 열린 행사 주관방송사
보도 내용	◦ 뉴스 데스크 평양 현지 생방송 2회(양각도 호텔/ APTN평양지사 이용) ◦ 통일전망대 기획 보도 ◦ 방북 취재인력 10명
보도 의미	◦ 현지에서 제작한 뉴스 아이템을 인터넷으로 서울에 전송

5. MBC스페셜 / 옥류관 서울 1호점 3부작(7월)	
보도 내용	◦ 냉면을 통해 한반도 평화시대의 미래를 논하는 푸드멘터리
보도 의미	◦ 외국 다큐 감독을 북측에 파견, 옥류관 내부 영상을 취재해 활용
6. MBC스페셜 / 6개월 후 만납시다: 북한 결핵병원 이야기(9월)	
보도 내용	◦ 북한 결핵퇴치 운동단체인 유진벨(Eugene Bell)의 활동기
보도 의미	◦ 유진벨 및 석해인 감독에게서 비디오를 받아 남측에서 제작

2. 연합뉴스 사례

연합뉴스는 남북 언론 교류를 위한 준비상황과 SNS 채널을 통한 대국민 인식 확대 사업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해왔다.

“연합뉴스는 4월 통일언론연구소 설립추진단을 출범시켰고, 4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8월 연구소를 정식 발족시켰다. 연구소는 한반도 평화공존과 공동번영, 통일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조직이다. 연구소의 첫 과제는 ‘연합뉴스 평양지국’ 개설 작업이다. 회사의 역량을 보다 조직적으로 결집하기 위해 사내 기구로 ‘평양지국 개설 준비위원회’도 만들었다. 준비위는 5월 초순 중국 베이징에 있는 북측 공식 창구를 통해 조선중앙통신에 공식 제안서를 보낸데 이어 기회가 될 때마다 북측과의 언론 교류 사업을 추진할 뜻을 전했다. 이와 함께 정부 당국뿐 아니라 여당 등 정치권, 그리고 학계 주요 인사와의 교류와 소통을 통해 연합뉴스 평양지국 개설의 필요성과 시의성을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연구소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 보다 쉽게 대중들로 하여금 연구소 활동과 취지를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중략). 북한 관련 뉴스는 ‘취재원’의 확인이 용이하지 않다는 특징으로 인해 그동안 무책임한 ‘카더라’ 보도가 횡행해왔다. 사실에 입각한 보도는 언론의 기본사명이며, 이는 북한 관련 보도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연구소는 이런 취지를 보다 대중 친화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뉴미디어 영역에 뛰어들었다. 통일언론연구소 유튜브 채널은 8월 1일 ‘정일용의 북맹타파’라는 대문명을 내걸고 출범했다. 이 채널의 주요 코너로는 ‘정일용의 북맹타파’와 함께 ‘평양이모, 서울조카’, ‘서유석의 통일아리랑’, ‘이우탁-김중배의 탁견중론’ 등이 있다.

국내·외 미디어 환경은 영상과 음성 콘텐츠 중심으로 급속도로 채편 중이며, 수용자의 눈높이에 맞춘 알기 쉽고 재미있는 콘텐츠,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콘텐츠가 대중으로부터 각광받고 있다. 갈수록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양한 북한 관련 소식과 외교 안보 이슈를 전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는 페이스북 페이지인 ‘연합, 서울 그리고 평양’을 공식적으로 개설, 북한 관련 뉴스와 칼럼, 보유 중인 북한 영상물 가공 등 다양한 콘텐츠들을 게재해왔다. 연구소는 한국언론학회와 공동으로 ‘통일시대에 대비한 남북 언론 교류 활성화 방안’ 공동토론회를 개최했으며, 향후에는 각 분야의 북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수송동 포럼’도 운영할 계획이다.”

연합뉴스는 특히 1991년 이후 자사의 남북 언론 교류 노력의 역사를 강조하면서 평양지국 개설 등에 대한 자사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연합뉴스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남북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민족의 동질성 회복에 이바지하는 뉴스정보 제작이라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 점은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돼 있다. 연합뉴스는 1991년 두 명의 기자를 평양주재원으로 내정 발령했으며, 이후 북측 조선 중앙통신과의 교류협력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1999년 북한과 옛 공산권 뉴스를 전문으로 다루던 내외통신을 인수·합병했으며, 북한 매체의 24시간 모니터링 보도 체제를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구축했다. 또 2002년부터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국·영문 기사와 사진을 실시간으로 받아 국내에 독점 배포하고 있다. 2006년 선양 특파원을 상주시키는 등 북한 관련한 뉴스 공급에서 국내외 최고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남북 당국 간 협조로 남북 통신사 간 교류가 성사될 경우 이를 수행할 만반의 준비와 역량을 갖추고 있다.”

〈표 2〉 연합뉴스 남북 언론 교류 추진경과

1991. 12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 계기로 남북 언론 교류 가능성에 대비해 연합뉴스 ‘평양 주재원’ (김갑생, 고한성 기자) 내정 발령
1999. 2	조선중앙통신과 교류를 목적으로 통일부로부터 북한주민접촉 승인 획득
1999. 2	김종철 사장, 김덕룡 당시 조선중앙통신사장에게 교류제의 서한 발송
2001. 8	민족공동행사에 참가한 정일용 논설위원, 김성국 조선기자동맹위원장에게 교류 제안서 전달

2002. 7	재일총련 산하 조선신보와 사진 교환 및 배포 계약 체결
2002. 12	재일총련 산하 조선통신과 조선중앙통신 기사 실시간 수신계약 체결
2004. 6	신기섭 국제·업무상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뉴스통신사기구(OANA) 총회서 김병호 조선중앙통신사 부사장 등과 만나 중앙통신 기사 직접 수신방안 등 논의
2005. 8	장영섭 사장, 8·15 참가 북측 대표단 통해 김기룡 사장에게 교류 촉구서한 전달
2007. 10	김기서 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 교도통신 대표단과 함께 방북해 고구려 고분벽화 사진전 개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조선중앙통신사장 등 면담
2013. 9	오재석 상무, 아시아태평양뉴스통신사기구(OANA) 총회 참석 중 조선중앙통신 림호룡 외사국장과 만나 양사 간 협력 강화 방안 논의
2017. 3	재일총련 계열 조선미디어와 노동신문 독점 사용계약 체결, 당일 신문 PDF파일 실시간으로 받아 제작 활용

※ 2007년 10월 당시 연합뉴스 사장이 평양을 방문해 조선중앙통신사와 면담하면서 제안했던 내용은 △상호 특파원 교류 △지국 개설 △연합뉴스-조선중앙통신사 간 기사 직접 교환 △인적 교류 확대 △연락 및 협의채널 구축 등이었음

3. KBS, SBS, JTBC 사례

KBS는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1차 정상회담과 9월 18~20일 평양에서 열린 3차 남북정상회담 과정을 생방송과 녹화 등의 형식으로 보도했다. 한 관계자는 “남북 언론 교류가 아닌 정부의 요청에 따른 국영방송사의 업무 수행”이라고 설명했다. KBS는 8월 평양에서 열린 유소년축구대회에는 MBC, SBS 등과 함께 보도에 참여했다. 모두 평양에서 뉴스를 제작해 서울로 송출하는 등 유사한 형태였다. KBS 방송문화연구소가 5월 30일 ‘남북교류와 통일시대’를 주제로 주최한 ‘공영방송발전포럼’에서 정윤식 강원대 교수는 ‘통일에 대비한 KBS의 준비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은 9개 사항을 주문했다.⁵⁾

5) <https://m.blog.naver.com/kbsbrin/221297375828>(11월 14일 오후 3시 검색)

1. 북한의 전파방송 분야의 현황에 관한 자료수집과 체계적인 관리
2. 인력의 훈련 및 준비: 효과적인 기술전수를 위한 계획 수립
3. 전파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통합 방법 준비
4. 전파방송 통신통합에 소요되는 비용추정 및 재원조달 방안 연구
5. 통일 이후의 전파방송 시장구도에 관한 연구
북한지역의 보편적 서비스 도입방안 연구
북한지역의 방송망과 통신망 고도화 방안 등
6. 전파방송 분야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학술 대회 주최
7. 남북 공동의 전파방송기술연구소(가칭)를 설립, 향후 교류 및 협력센터로 활성화
8. 전파방송 분야의 전문가나 기술자의 왕래 활성화 등
9. 통일 이후 방송국 운영 및 프로그램 제작 및 편성방향 숙의

SBS는 유소년들의 10여 년간 축구교류를 기록한 영상을 단독 입수해 추석특집 다큐멘터리 ‘소년, 경계를 넘다’를 제작해 방영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10월 강원 춘천 유소년 축구대회 참석차 방남한 북측 소년 소녀 선수단을 밀착 취재한 다큐멘터리 ‘경계를 넘다2, 소녀들의 가을’을 제작 중이다.

7월 9일부터 12일까지 언론 최초로 보도국장 등 8명의 대표단을 평양에 파견해 관심을 모았던 JTBC에서는 기한 내에 공식적인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 당시 통일부는 이들의 방북 신청 승인 사실을 발표하면서 대표단이 북측 민족화해협의회 및 방송 관계자들을 만나 남북 언론 교류 및 평양지국 개설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⁶⁾ 그러나 현재까지 JTBC의 평양지국 개설 문제 등이 진전되고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언론계에 따르면 당시 대표단은 북측 인사뿐만 아니라 현지에 주재하고 있는 외국 언론사 특파원들과의 간담회 등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JTBC가 추석 연휴를 앞둔 9월 23일과 24일 잇달아 방송된 ‘서울·평양, 두 도시 이야기’를 방송한 것은 방북이 자유로운 한국계 인사를 통한 영상 취재의 대표적인 사례다. 1부 방송 ‘서울 요리, 평양 요리’, 2부 방송 ‘한강과 대동강’으로 편성된 이 시리즈는, 평양 음식점 ‘옥류관’, 그리고 라이벌 ‘청류관’을 비롯한 다채로운 평양 음식을 찾아가는 미식기행 다큐멘터리다. 북측 현장 취재는 재미 언론인 진천규 기자(통일TV 대표)가 진행했고 그 영상을 서울 JTBC 본사가 넘겨받아 편집하는 형식을 활용했다.⁷⁾

6) 중앙일보 인터넷판(2018. 7. 6).

Ⅲ. 2019년 계획과 장기적 전망

북한 비핵화를 위한 북-미 고위급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도 각 언론사들은 내년도 사업 구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북 제재에 따른 활동 제약과 사내 비밀을 모두 공개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를 고려해 답변 받은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표 3〉 2019년 언론사별 남북 언론 교류 계획

언론사	답변 요지
MBC	◦ 다큐, 뉴스, 예능 등 기회가 닿는 대로 협력사업을 강화할 예정
SBS	◦ 5월 강원 원산에서 열리는 유소년축구대회 참가 등
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과 '한반도의 생태계' '민족 문화유산 답사기' 등 공동취재 ◦ 조선중앙통신과 학술대회 공동주최도 추진

내년 초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비핵화에 대한 진전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한 장기 전망에 대해서는 보다 더 긍정적인 전망이 모아졌다. 사업의 방식은 지금과 같은 정부 및 민간사업 편승 형식이 아니라 언론사와 북측의 직접 교류 형식이 진행될 것이라는 데 의견이 많았다. 북한 현지 제작에서 나아가 남북 공동제작 형식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다양한 장르가 진행될 수 있으나 북한 체제의 특성을 고려해 자연 다큐나 경제실적 홍보 등 부담이 크지 않는 내용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연합뉴스는 독일의 사례에 비출 때 방송사보다 통신과 활자매체의 교류가 앞설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표 4〉 북한 비핵화 전제 남북 언론 교류 장기 전망

언론사	답변 요지
MBC	◦ 대북 제재 해제를 계기로 언론사의 독자적인 북한 현지 취재, 다큐, 예능, 공연, 스포츠, 더 나아가 드라마 등으로 확장될 것 ◦ 형식도 현지 제작에서 더해 공동제작으로 확장될 것으로 예상
SBS	◦ 북측과 언론사의 직접적인 교류를 통해 사업이 진행될 것
연합뉴스	◦ 과거 독일 경험을 유추하면 방송교류는 통신과 신문(활자매체)에 비해 시기적으로 나중에 추진될 가능성이 큼

7) JTBC 인터넷판(2018. 9. 13).

IV. 제도적 장치: 남북언론중재기구의 필요성 검토

1. 제도적 뒷받침 가능성

북한 비핵화를 전제로 남북 언론 교류가 활성화될 경우 뒷받침되어야 할 제도적인 장치에 대해 응답자들은 △취재의 자유 보장 △지국 설치 및 특파원 파견 촉진 및 보장 장치 △악의적 오보에 대한 구제장치를 들고 이를 위한 남북 당국 간 사회문화 교류 합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가운데 특히 상호 취재자유 보장은 모든 것에 우선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적 기반으로 보인다.

〈표 5〉 남북 언론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언론사	답변 요지
MBC	◦ 상대측의 자유 취재를 보장, 보호하는 조치 ◦ 언론사 지국 특파원 파견에 대한 당국간 촉진제도 및 보장 장치 ◦ 악의적 오보에 대한 반론권 및 구제장치
연합뉴스	◦ 평양이나 서울에 상주하거나 주재할 기자들의 신변안전 보장 ◦ 지국운영을 위한 세금면제(이중과세방지)협정 ◦ 교류와 관련된 당국 간 세부적인 합의 등

특히 연합뉴스는 “6자회담 참가국 가운데 평양에 상주지국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한국이 유일하다”며 국가기간통신사인 자사의 평양지국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평양에는 북한의 전통적 우방인 러시아 이타르 타스 통신과 중국의 신화통신이 오래전부터 상주해 활동했고, 지난 2006년 9월 서방 언론 가운데 처음으로 AP의 영상전문 매체인 APTN이 진출한 이래, 교도통신(2006년 9월), AP(2012년 1월), AFP(2016년 9월)가 속속 진출했다. 미국 보도전문채널 CNN도 비상주로 현지 취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며, 로이터 통신과 북한과 국교를 맺은 영국의 BBC 방송도 현지 특파원 상주를 다각도로 타진하고 있다.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의 핵심역할이 ‘정보주권’ 실현과 ‘민족 동질성 회복’이라는 점에서, 국제적으로도 한국을 대표해온 매체인 연합뉴스가 북한에 지국을 두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그러나 북한 매체들에게 모든 것을 개방할 수 있으며 이미 사실상 개방중인 한국에 비해, 북한은 체제의 특성으로 인해 그럴 수 없다는 것이 현재 남북 언론 교류 과정 속에 실존하는 비대칭성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이에 대한 논의만으로도 전혀 새로운 토론회 내용을 구성할 수 있을 것 같다.

아마도 오늘날의 정치적 지형에 따르면 두 가지 상반된 주장이 대립할 것이다. 남한이 허용하는 만큼 북한도 남측 언론에 취재의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이른바 ‘엄격한 상호주의’다. 이에 대해 북측의 체제 특성을 고려해 남측이 어느 정도 양보해야 한다는 ‘완화된 상호주의’ 또는 ‘비대칭적 상호주의’가 맞설 수 있다. 남북한 취재자유 의 상호주의 논쟁은 본 토론회의 핵심 쟁점인 중재기구 필요성의 가장 큰 전제조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통일이 되기 전 동서독의 언론 교류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다. 동독 언론인들은 서독에서 자유롭게 취재할 수 있었지만 서독 언론인들은 취재의 자유에 상당한 제약을 받았다는 것이다.

2. 남북언론중재기구의 조건

실제로 이번 발표를 위한 설문조사 결과, 남북 간에 언론중재기구가 필요한지에 대한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가 컸다.

‘악의적 오보에 대한 반론권 및 구제장치’를 필요한 제도적 장치로 꼽았던 김현경 MBC 국장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언론중재제도는 남측 언론의 책임감을 높이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북측의 후속조치 및 구제 가능성을 열어놓아 북측의 문호 개방, 활동을 확대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북한 현지 취재가 위축되는 주된 이유는 북측의 경직성 및 언론의 역할에 대한 남북 간 차이 때문이지만, 남측 언론의 적대적이고 무책임한 보도도 원인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이우탁 연합뉴스 부소장도 “(남북 간 언론중재기구 설치) 아주 중요한 대목이다. 북한 보도의 경우 취재원 확인이나 오보방지 방안이 없어 그동안 무리한 보도 등이 있어왔다. 하루빨리 초보적이거나 남북 간 언론보도 확인 창구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언론 교류 활성화 시 언론중재기구 공동설립도 좋은 방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KBS 관계자는 이에 따른 남한 언론들의 북한 보도 위축 가능성과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 관영 매체들의 발달 상태를 지적하며 “남한의 독자적 언론자유 기능 유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 북한체제의 언론 환경 속에서 언론중재는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 측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해당 언론사가 책임 있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 단계” 라고 지적했다. 표언구 SBS 단장도 “현 단계에서는 (남북한 언론 중재기구) 필요 없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 문제에 관하여는 지난 9월에 발간된 ‘언론중재’ 제148호(2018년 가을호)가 변상욱 CBS 대기자의 글을 통해 심층적으로 다룬 바 있다.⁸⁾ 대체로 남북 간에도 언론중재 제도가 필요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동안 남북 매체들이 발신한 오보와 악의적 보도가 남북 간의 불신을 키운 것은 사실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시정하기 위한 언론중재 제도가 만들어지고 기능하기 위해서는 △정치 체제 △언론 구조 △언론 법제의 차이를 극복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그 가운데 핵심이 바로 필자가 위에서 제기한 남북한 언론자유 의 비대칭성이다. 익명의 KBS 관계자가 지적한 것처럼 현실적 제도적으로 정보의 대외공개를 막고 있는 북한 체제의 특성상, 한국이 우리 내부와 같은 수준의 언론중재제도를 만들 경우 자칫 북한 보도 전반에 대한 우리의 자유를 스스로 속박하는 결과를 낳기 쉽다는 지적이다.

“북한의 기밀법(1997년 제정)은 제2조에서 ‘해당 기관의 승인 없이 공개할 수 없는 중요사실’을 기밀법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언론보도에 대해 남측 위원들이 증거자료나 진술을 요구할 경우 북측 위원들이 이에 응하거나 적극 조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생각해 볼 일이다. 이 외에도 언론의 책무와 본령에 대한 입장도 다르고 보도내용을 판단하는 기준도 상이함이 클 것이다. 또한 반론권의 개념 자체를 갖고 있지 않은 국가통제 언론과 언론을 통제하는 권력부서에 시정과 개선을 요구한다는 것은 명확한 한계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변상욱 CBS 대기자는 전반적으로 남북 언론 교류의 활성화와 제도화, 그중 하나로서의 중재제도 설립에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남북 간에 만남이 필요하고 상호 간 교류의 필요성이 높은 건 사실이다. 그러나 언론사 간 교류나 언론 유관 협의의 교류가 그

8) 변상욱, 앞의 글.

렇게 시급하고 중요한 건 아니다”라며 이 문제를 좀 더 폭넓은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주문했다.

“과거에 펼쳐진 언론사나 단체의 경쟁적인 비즈니스나 특종보도 경쟁이 재연되는 것보다는 남-북-미-중이 종전과 평화로 함께 다가가는 만큼 실효적이고 내실있는 교류를 해야 할 시점이다. 남북한의 화해와 협력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지속가능하며 항구적일 수 있는 사업에 힘을 모아 나갈 필요가 있다.”

V. 제언과 결론

동서독의 역사적 경험에 따르면 양측의 언론 교류는 통일과 통합의 과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 동독 주민들은 분단 이후에도 서독 방송을 비교적 쉽게 수신할 수 있었으며 양국 간 언론과 언론인 교류도 당국 간 합의에 따라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동독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서독 언론들의 정확하고 객관적인 보도는 동독인들의 서독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⁹⁾ 이러한 독일의 앞선 경험은 남한 언론인들에게 남북한 언론 교류의 당위성을 제공하면서 실천에 대한 의지와 희망을 갖게 한다.

특히 대한민국 언론은 일제강점기 치하에서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사회 발전을 추동하는 중요한 행위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민족의 독립과 자유민주주의 수호, 이후 산업화와 민주화의 진전에 언론이 선도자 역할을 했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바이다. 이와 같은 독일의 경험과 대한민국 언론의 사회적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북한 문제의 해결과 나아가 분단의 극복, 즉 통일의 길에 이르기까지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 매우 자명하며 당위적인 명제다.

대한민국 언론이 남북 언론 교류를 통해 ‘북한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느냐는 한반도 미래 전체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북한 문제의 해결을 구체적으로 ‘비핵화 된 북한이 건전한 정상국가로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면, 과연 한국 언론은 ‘적극적으로 추동하는 능동적이고 주관적인 행위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현실의 변화를 따라가 공론의 장에 이를 반영하는 다소 수동적이고 객관적인 관찰자’에 머무를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9) 심영섭 (2018), 분단 저널리즘을 넘어서, <언론중재>, 148호; 박주연(2011), 분단 저널리즘 해외사례: 독일-동서독 분단 당시 방송 및 언론의 교류, <관훈저널> 118호,

필자 역시 전자의 역사가 펼쳐지기를 바란다. 하지만 커다란 제한이 우리 내부와 북한 내부에 있다. 첫 번째는 남한 내 정파 간 대북정책의 합의가 부재한 현실이다.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도록, 현존했던 이른바 보수정권과 진보정권은 전혀 다른 대북인식과 처방을 그 정책으로 추진해왔다. 보수정권은 북한을 교육과 교정의 대상으로 보고, 현실 사회주의의 명분을 쓴 퇴행적인 김씨 3대 세습 독재정권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남한 정부와 국제사회가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대로 진보정권은 북한을 포용과 설득의 대상으로 상정하고 북한 체제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대화와 설득으로 북한 문제를 풀어나갈 것을 강조해 왔다. 문재인 정부 역시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연장선상에 있고 현재 언론들이 추진하는 남북 언론 교류는 남북 대화 기초의 정치적 환경 속에서 진척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선거에 따라 정권이 평화롭게 교체된다. 향후 총선이나 대선에서 보수정권이 다수를 확보할 경우 과거의 경험과 현재 정치와 여론 지형에 따르면 대북정책은 다시 원칙을 강조하는 쪽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북한의 대남정책이라는 것이 남한의 대북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¹⁰⁾

“둘째, 북한의 대남정책은 남한 정부의 대북정책에 반응한다(상호성). 북한을 상대방으로 하는 남한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 대남정책의 성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다. 역대 모든 정권하에서 남북한의 무력 충돌이 끊이지 않았다.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에도 두 차례 연평해전과 같은 남북 간 무력 충돌이 있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이라는 전대미문의 도발을 감행한 것은 비핵화와 개혁개방 등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반발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한 언론 교류라는 큰 틀의 사회문화 교류가 향후 남한 정권 교체에 따른 대북정책의 변화, 이어지는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의 흐름을 거슬러 독자적으로 생존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의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말이다.

10) 신석호(2012), <분단 저널리즘 뛰어넘기> 서울: 리북, 64.

두 번째로 현시점에서 북한과의 언론 교류는 보통의 국가 간 언론 교류의 일반성보다는 특수성이 많다는 점에서 보다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¹¹⁾ 교류의 상대방인 ‘북한과 평양의 당국’은 자유세계의 국가와 민주적인 정부와는 다르다. 남북한 언론 교류는 근본적으로 그러한 특수한 북한 당국과 ‘관계를 맺는 일’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닌, 아주 특수한 상대방이 있는 과업이라는 것이다.

모두가 아는 것처럼 북한은 현재 김정은이라는 최고지도자가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독재국가다. 형식적으로는 조선노동당이 지배하는 현실사회주의 국가이고 모든 매체는 관영이다. 노동당 선전선동부의 지휘를 받는 모든 매체는 당과 최고지도자와 당의 권위를 위해 일한다. 그들의 저널리즘은 오로지 진실을 추구해야 한다는 우리가 아는 열린 세상의 저널리즘과 질적으로 다르다는 이야기다.

물론 김정은에게 진정성이 있다면, 향후 전개될 비핵화 과정에서 북한의 민주화와 개혁 개방이 진전되기를 기대한다. 북한이 인권 문제를 해결하고 ‘정상국가’로 변모해 가는 과정에 북한의 언론관도 정상화되기를 바란다. 최고지도자와 당의 권위를 해치더라도 진실이라면 보도하는 민영 매체가 나오고 남한을 포함한 외부 매체들의 자유로운 접근과 취재도 허용되는 상황 말이다.

하지만 우선 당장 북한 당국은 남한 언론들의 제안과 요구를 모두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것 같다. 북한학계에서는 이를 ‘북한 체제의 수용능력이 떨어진다’고 한다. 언론 교류는 정보의 소통을 의미한다. 독재체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다. 남한 언론과의 교류는 자칫 독재 체제의 이완을 가져올 수 있다. 남한 기사를 받아들이는 것도, 북한 기사를 남한에 보내는 것도 그러하다.

그것이 북한체제에 줄 다양한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조직을 투자해 통제와 감시가 가능한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남한 기사를 받아들인다면 도대체 어디까지 접근과 취재, 보도를 허용할 것인지, 북한 기사를 남한에 보낸다면 그들을 어떻게 선발하고 감시할 것인지에 대한 내부적인 기준 마련도 필요할 것이다.

이런 북한 당국을 설득하고 개방시켜 나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성급하게 접근할 경우 한국 언론이 가지고 있던 평판과 자유를 희생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11) 신석호(2018), 남북 언론 교류 이전에 우리가 고민해야 할 세 가지, <신문과 방송>, 148호.

것이다. 일부 응답자들이 언론자유 침해의 가능성을 들어 남북언론중재기구 설치에 회의적인 것도 그 때문이다. 언론중재기구까지 가지 않더라도 많은 언론들이 당장 해결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 평양 주재에도 위험이 따른다. 북한 내부 상황을 제대로 취재할 수 없거나 취재 하더라도 신속하고 공정하며 객관적으로 쓸 수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아주 특수한 북한 당국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2012년 1월부터 2년 가까이 AP통신 평양지국장을 지낸 한국계 미국인 진 리 씨(우드로윌슨센터 한국센터장)는 2014년 당시 워싱턴 특파원이던 필자와 만나 “취재를 위해 북한 당국자들과 협상하는 일이 매우 힘들었다”고 털어놓았다. 무엇을 취재해 어떤 보도를 하는지 자유세계에서 허용되는 기본적인 언론 자유가 제한되고 보고 들은 것을 모두 쓸 수 없는 상황은 오해와 비난을 부르기도 했다. 그의 재임 기간 동안 미국 언론계에서는 ‘AP통신이 북한 당국과의 관계를 의식해 정치범 수용소로 상징되는 열악한 인권 상황 등 북한 체제의 부정적인 측면을 눈감거나 호도하고 있다’는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북한과 언론 교류에 나서는 우리 언론계는 물론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고 능력을 키워야 한다. 북한 당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최대한 사실과 진실에 접근하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 어떤 주제에 집중하고 어떤 주제는 피해야 하는지를 가릴 줄 알며, 북한 당국자들을 설득해 사실과 진실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전문기자를 육성하고 취재하는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 평양발 보도들이 서구 저널리즘의 원칙을 지키지 못하는 잠정적인 기간 동안 생길 문제에 대한 공론화와 사회적인 합의도 필요하다. 대한민국 언론의 평양발 기사와,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등 탈북자들의 증언이 다르다면, 매체의 신뢰도 자체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평양 현지발 기사의 특수성을 이해해주지 않는다면 말이다.

이런 저런 상황들을 감안할 때, 한반도 주변 안보 상황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진전이라는 구조적인 진전을 이루더라도 남북 언론 교류는 북한의 특수성을 감안한 충분한 사전 준비와 고민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변상욱 CBS 대기자가 지적한 것처럼 취재하듯 경쟁적으로 북측의 문을 두드리기보다는 개인과 조직, 국가적 차원에서 충분한 성찰을 통해 장기 플랜을 마련하는 지혜와 안목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이번 토론회가 보다 더 진전된 논의를 부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